

FIP-2016-0005 (통권 제230호, 2016. 08)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ISSUE
PAPER

Contents

〈요약〉

I . 검토배경	1
II . 글로벌 보호주의 추이	2
III . 우리 기업에 대한 보호주의 현황	4
IV . 글로벌 보호주의가 국내 업계에 미치는 피해	7
1. 美, EU의 중국 견제에 괴로운 한국	7
2. 중국 비관세장벽 적극 활용, 자국 산업 보호	8
3. 개도국은 자국 산업육성 위한 규제, 시스템 미비로 인한 통상애로까지..	10
V . 글로벌 보호주의 전망	13
1. 美 대선 누가 되든 보호주의 강화될 것	13
2. 보호주의의 뜨거운 감자 중국	15
3. 브렉시트, 보호주의의 심화 VS 자유주의의 확산	16
VI . 대응과제	17

〈참고문헌〉

- FKI Issue Paper는 경제 및 정치·사회분야에서 우리 모두가 대비해야 할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대안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자 발간하고 있습니다.
- 이 자료는 본회 국제경제팀 김다미 책임연구원이 작성한 것입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2-3771-0389 FAX : 02-6234-5389 E-mail : sdamis@fki.or.kr

□ 글로벌 보호주의 조치 증가

-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대
- 국가 간 관세장벽은 낮아져 가는 추세이나, 최근 반덤핑 등의 수입규제와 비관세 장벽 등의 보호주의 무역조치는 증가하는 추세

□ 각국의 보호주의 조치로 인해 국내 업계 수출 애로 호소

- 한국은 현재 전 세계 시장에서 181건의 수입규제와 48건의 비관세장벽 직면
- 미국과 EU 등 선진국의 수입규제, 중국의 까다로운 비관세 장벽, 개발도상국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비합리적 무역제한조치

□ 앞으로 글로벌 보호주의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

- 미 대선을 앞두고, 양 당의 후보 모두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 환율조작국 제재 등 강력한 보호주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주요 국가와의 통상 마찰 가능성 대두
- 올해 말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 문제를 앞두고, 중국과, 미국·EU의 통상 마찰이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우리기업의 피해 발생 우려
- 브렉시트가 EU회원국 탈퇴 및 스코틀랜드 등 분리 논의에 영향을 주고, 개도국에 시장개방 반대의 빌미를 제공하여 보호주의를 가속화 시킬 우려 있음

□ 대응 과제

- 정부는 FTA 체결 및 업그레이드를 통해 시장을 확대, 대화 채널 활성화, 합리적 분쟁해결을 통해 자유무역 기조 확대
- 기업은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공동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통상전문가를 활용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처
- 우리나라가 외국기업에 가하고 있는 차별적 수입규제들을 점검하고 통상 선진 시스템을 구축해 자유무역 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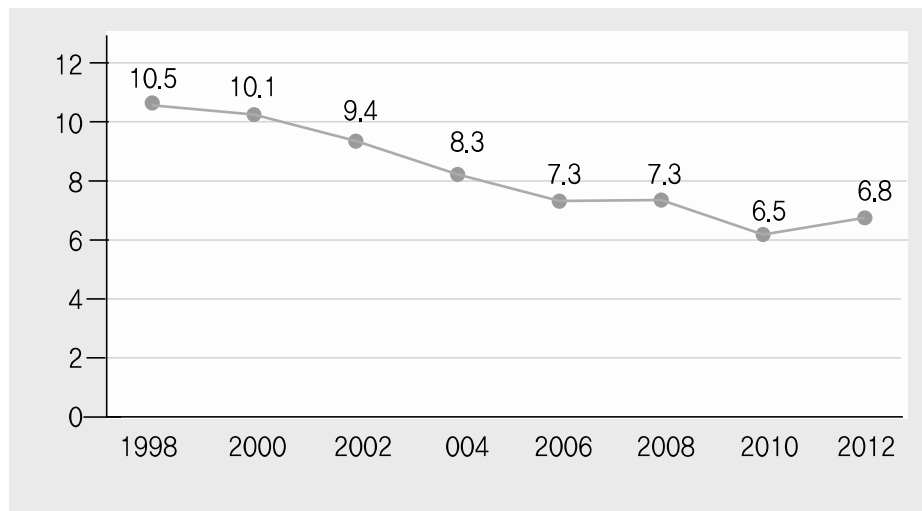
I. 검토배경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경기회복 지연과 신흥국의 성장 동력 부재로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이 지속
 - (세계) 경제성장률은 2009년 5.4%로 반등한 뒤, 2011년 4.2%를 한차례 기록한 후 줄곧 3% 수준의 경제에 그쳐 경제성장 동력이 약화된 상태
 - (선진국) 유럽('15년, 1.6%)과 일본('15년 0.5%)이 좀처럼 회복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2015년 1.9% 성장에 그침
 - (개도국) 고성장을 이끌던 중국의 성장세가 6%대로 하락('15년, 6.9%)하고 브라질('15년 -3.8%) 및 러시아('15년 -3.7%) 등 주요 신흥국은 마이너스 성장세 기록
- 일부 국가들은 저성장세 탈피를 위해 한계산업의 구조조정 또는 신산업 발굴 등 적극적 산업정책을 펴기보다는 반덤핑 및 비관세장벽의 신설 등 보호주의적 수단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선진국) 미국과 유럽의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급증
 - (중국) 강제성제품인증 등 비관세장벽 조치 강화
 - (개도국) 자국의 중점 육성산업을 중심으로 기술적 무역규제조치 도입
- 특히 그동안 자유무역의 전도사였던 미국이 대통령 선거를 맞아 국민들의 경제적 불만을 정치 이슈화하면서 보호주의를 급속히 확산시키고 있음
 - 미국이 주도한 TPP를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거부하고 후보별로 FTA 전면 재검토 등 공약
 - 주요 교역대상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공약 또는 미국 내 생산을 독려하기 위한 각종 차별적 공약 서둘러 발표
- 세계 각국의 보호주의적 정책들이 통제되고 철회되지 않는다면 글로벌 통상 전쟁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보호주의의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 과제를 살펴보고자 함

Ⅱ. 글로벌 보호주의 추이

- WTO 출범 이래,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활발해지며 국가 간 관세 장벽은 낮아져 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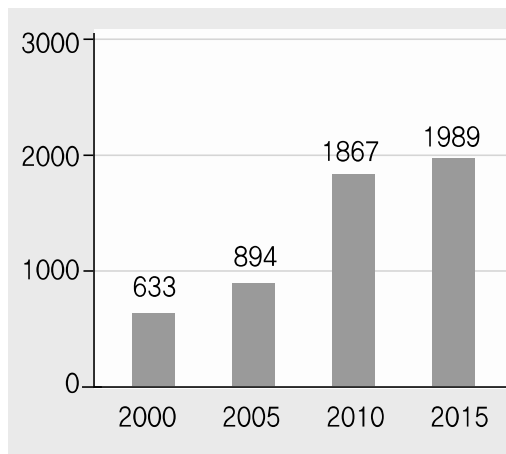
< 세계 평균실행관세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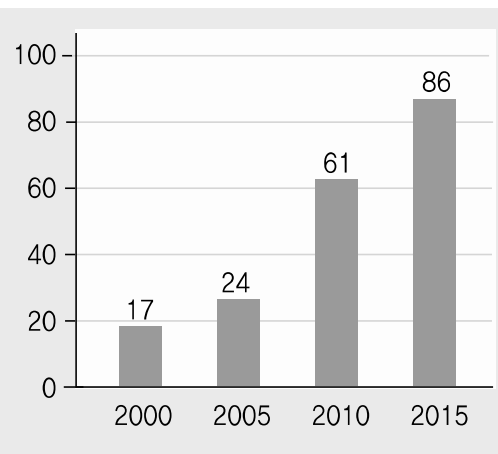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 반면, 무역기술장벽이나 통관, 위생조건 등 수입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실질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임
- 대표적 비관세장벽인 무역기술장벽(TBT)의 경우, WTO에 전달된 통보문이 2015년 현재 총 1,989건 발행되어 15년 전인 2000년에 비해서는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세계적으로 기술 규제가 증가하는 추세를 알 수 있음
 - * TBT :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를 의미함, WTO TBT협정에 따라 회원국은 기술규정, 인증 등을 제·개정할 때 WTO 사무국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음
 - WTO TBT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제기된 특정무역현안(STC)은 총 86건으로 2000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기술 규제가 실제로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 STC : 기술규제가 교역상대국으로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이라 함

< TBT 통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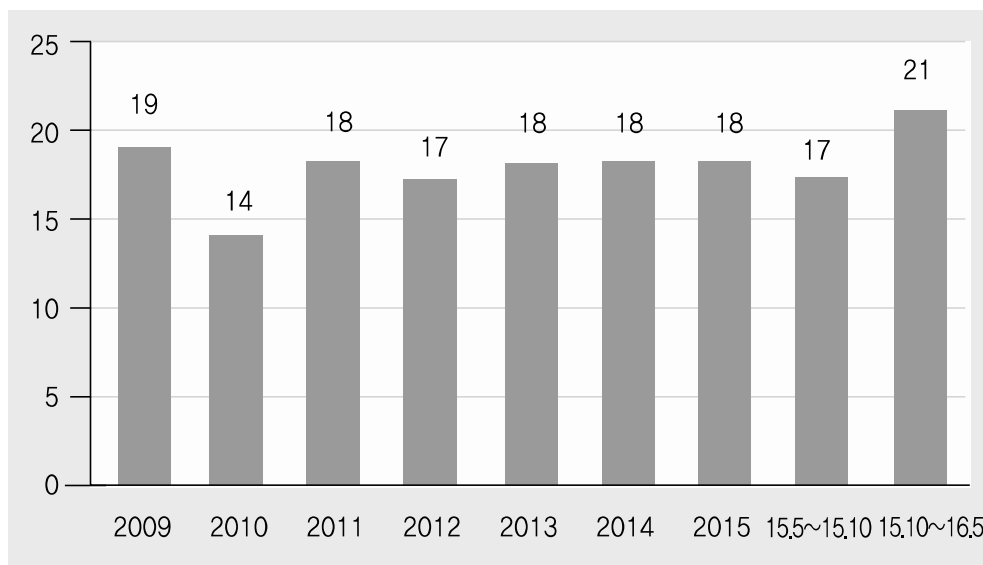
< 연도별 STC 현황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최근 WTO 조사에 따르면, **G20 국가의 보호주의 무역조치가** ‘15년 10월 중반에서 ‘16년 5월 중반까지 145건 집계되어 월 평균 약 21개에 달함
- 이는 일주일에 약 5건의 규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09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

< G20 무역제한조치 - 월평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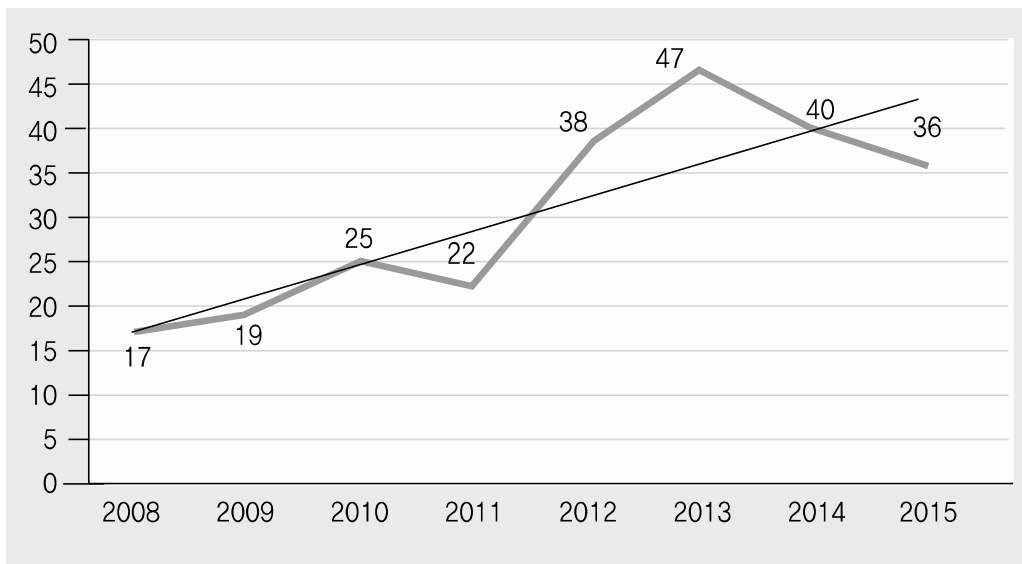


자료 : WTO

Ⅲ. 우리 기업에 대한 보호주의 현황

- 우리 기업들은 전 세계 시장에서 **181건의 수입규제** 및 **48건의 비관세 장벽**에 직면하고 있음('16년 8월 8일 기준)
 - (수입규제) 반덤핑,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등 직접적으로 상대국의 수입을 규제하는 수입규제조치는 인도(32건), 미국(23건), 중국, 브라질(각 11건), 인도네시아, 터키(각 10건) 순으로 다수의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규제가 진행
 -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도별로는 '13년이 47건으로 가장 많음
 -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이미 전년 36건의 절반이 넘는 20건의 제소가 이루어짐

< 對韓 제소추이 >



자료출처 : 무역협회

- (비관세장벽) 비관세장벽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국별로는 중국(26건), 인도네시아(5건), 일본(4건) 등의 순으로 **중국의 비관세장벽이 전체의 54%**를 차지
 - * 비관세장벽협의회를 통해 신고, 접수되어 우선 해결되어야 할 비관세장벽이 총 48건으로, 실제 기업들이 겪는 비관세 장벽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
 - * 비관세장벽협의회 : '13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를 위원장으로 무역협회가 사무국을 담당하며, 정부부처와 업종별단체 등 40여 개 기관으로 구성된 민관 공동협의체

< '16년 현재, 對韓 무역장벽 현황 >

나라	비관세장벽	수입규제			비관세+수입규제
		반덤핑	반덤핑/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중국	26	11	0	0	37
인도	2	25	0	7	34
미국	3	16	7	0	26
인도네시아	5	5	0	5	15
터키	1	6	0	4	11
브라질	0	11	0	0	11
호주	0	9	0	0	9
태국	0	5	0	4	9
캐나다	0	8	0	0	8
말레이시아	0	4	0	3	7
베트남	2	1	0	4	7
파키스탄	0	5	0	0	5
일본	4	1	0	0	5
EU	0	6	0	0	6
기타(16개국)	5	13	0	21	39
합계	48	126	7	48	229
		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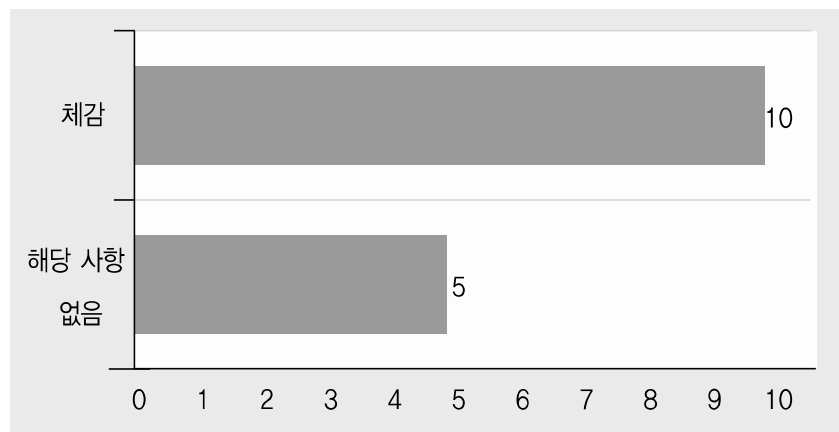
자료출처 : 무역협회

□ 업종별 협회 15곳을 대상으로 문의한 결과 **10개 업종이 직간접적으로 보호주의를 체감**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5개 업종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응답

* 체감 : 철강, 자동차, 전자,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정밀화학, 화학섬유, 화장품, 타이어, 식품

* 해당사항 없음 : 반도체, 기계, 건설, 조선, 석유

< 업종별 보호주의 체감 >



- 철강은 전 세계 18개국에서 82건의 수입규제 또는 조사를 받고 있어 가장 심각하며, 자동차는 ASEAN 국가에서 기진출한 일본 업체를 위한 보호주의 조치가 많음
- 지역별로는 중국이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통해 보호주의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어 대부분의 업종이 수출 애로를 겪고 있음
 - 일부 개도국에서는 시스템 미비로 인한 통관 지연 등 비합리적 절차로 인해 발생하는 애로까지 겹쳐 우리 기업의 수출환경 점차 악화
- 또한 미 대선, 브렉시트 등의 최근 글로벌 이슈들에 대해서는 아직 직접적으로 피해 예측을 할 수 없지만 보호주의 강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에 공감한다고 언급

주요 인터뷰 내용

“중국의 강제성제품인증 등의 비관세장벽에 대해 다양한 루트로 지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될 기미도 안보이고, 실제로 발생하는 수입장벽 사례들을 봐도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업체의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개도국에서는 자국 산업 키우겠다고 자국 생산량으로 충족이 안 되는 경우에도 세이프가드 같은 강도 높은 수입규제 조치를 빈번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혐의로 종결이 되어도 대응할 때마다 많은 비용 부담이 발생합니다.”

“일부 개도국은 제대로 통관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습니다. 어떤 통관 담당자를 만나냐에 따라 수월하게 통관될 때도 있고,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일관성이 없어 애로가 발생할 때마다 임기응변으로 대응해야합니다.”

“철강은 특성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철강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업종입니다. 미국의 경우 과잉생산으로 철강업이 힘들어지니 미 대선을 맞아 굉장히 압박하고 있고, 과거와 달리 불공정한 수입 규제 조치와 판정이 증가하고 있어 대응이 어렵습니다.”

Ⅳ. 글로벌 보호주의가 국내 업계에 미치는 피해

1. 美, EU의 중국 견제에 괴로운 한국

- (미국) 글로벌 과잉생산과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기업경쟁력을 상실하면서 미 철강업계가 구조조정 위기에 처함에 따라 중국을 타깃으로 한 각종 수입 규제 조치가 증가
 - 대선 정국을 활용하여 미 철강업계가 철강업종에 대한 수입규제를 요구한 결과, 강도 높은 수입규제 조치가 진행 중
 - 최근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냉연 강판에 사상 최고 수준의 세율인 522%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내부식성 철강제품에 대해 최대 451%의 관세 부과
 - * 냉연강판 : 반덤핑세 265.8% + 반보조금 상쇄 관세 256.4%
 - * 내부식성 : 반덤핑세 210%
 - 美 US스틸은 중국 철강기업 40여 곳에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美 국제 무역위원회(ITC)에 제소
 - * 관세법 337조는 수입 배제명령과 미국 내 유통된 해당 제품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가 가능해 업계 관심 큼
 - 중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여파가 우리 기업에까지 미치면서 국산 철강재에 대해서도 고율 관세 부과 판정
 - 내부식성 철강제품에 대해 예상을 뛰어넘는 8.75~47.80%의 반덤핑 관세 확정
 - 냉연강판은 6~34%의 반덤핑 관세와 3.9~58.4%의 상계관세도 추가해 기업별로 38.2%(현대제철)~64.7%(포스코)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
 - 열연강판에 대해서는 포스코가 반덤핑 관세율 3.89%, 상계관세 57.04%로 총 60.93%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현대제철의 경우 반덤핑 9.49%, 상계관세 3.89로 총 13.38%의 관세 부과될 예정
 - * '15년 對美 내부식성 철강 수출량 : 64만 톤(약 5.6억 불)
 - * '15년 對美 냉연강판 철강 수출량 : 16만 톤(약 1.4억 불)
 - * '15년 對美 열연강판 철강 수출량 : 115만 톤(약 7억 불)

- (EU) ‘20년 5월 15일까지 **역외국 철강제품 수입감시제도** 시행을 통해 역내 철강산업의 피해여부를 파악하고 역외 수출기업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
 - EU의 철강 수입량은 ‘12년~‘15년간 4,180만 톤에서 5,500만 톤으로 늘었고, 수출량은 6,230만 톤에서 5,070만 톤으로 감소
 - 역내에 철강 제품을 들여오는 업체들에 대해 물량과 금액을 기재한 감시서류를 당국에 제출하도록 강제해 EU 내 철강 수입 추이 파악
 - 또한 이탈리아는 한국과 중국의 철강제품을 통관 시 방사능 검사를 의무화함

2. 중국 비관세장벽 적극 활용, 자국 산업 보호

- (중국) 각종 비관세장벽과 수입규제 조치를 적극 활용해 다양한 업종에서 자국 기업 보호
 - (자동차) 중국의 높은 수입 관세와 까다롭고 복잡한 강제성제품인증 (CCC :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로 자동차 수출 애로 호소
 - * CCC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158종의 공산품에 대해 국제 인증을 받은 품목일지라도 중국만의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인증서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인증을 요구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무역기술장벽으로 꼽힘
 - 인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와 시험이 복잡하고, 평균 7~9억 원의 비용이 들며 약 1년 정도 소요

<중국과 유럽 인증 제도 차이점>

	중국	유럽
인증 요구 자료	약 2,200여 개	약 700여 개
인증 비용	평균 7~9억 원	평균 2억 원
인증 소요 기간	13개월	4개월

출처 : 자동차협회

- 또한 동일 법규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별 시험 방식에 차이가 있어 제작사에서는 두 가지 기준을 맞추는 등 이중규제를 받고 있음
 - * 대표적인 예로 국가환보국은 차량 1대로 3회 실시하는 반면, 북경환보국에서는 차량 3대를 대상으로 각각 1회씩 실시

- (석유화학) 그동안 자국 산업육성을 위해 반덤핑 등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해 온 결과, 지금은 중국의 자급률 상승으로 규제유인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반덤핑 재심 반력으로 인해 업계 애로 호소
 - 특별한 사유 없이 반덤핑 재심 신청을, BPA의 경우에는 4회('10년, '11년, '14년, '15년), 아세톤의 경우에는 1회('15년) 반려함
- (정밀화학) EU의 신(新)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도입하면서 규제는 강화한 반면,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을 정하지 않아 당국의 자의적 규제로 수출시 애로 발생
 - 화학물질은 순도 100%로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함유량 기준에 따라 HS코드가 달라지며, 의도치 않게 분류되어 규제 조치 가능성 있음
 - * EU의 REACH 제도나 국내 화평법과 같이 불순물의 최대 허용치 명시 필요
- (디스플레이) 평판디스플레이의 경우 대중 수출 비중이 74%를('15년 기준) 차지하나 중국에서는 국제규범에 맞지 않게 국내 업계 수출을 가로막고 있음
 - HDMI 모니터는 세계관세기구(WCO) 결정에 따라 컴퓨터용으로 분류해야 하는데 기타용으로 분류하는 바람에 관세 부과
 - * WCO는 제54차 HS위원회에서 HDMI 모니터를 ITA(정보기술협정) 품목에 포함시켜 관세부담이 없는 컴퓨터용 모니터로 분류 결정하였으나 중국은 미이행
 - 중국 내 공장에서 제3국에 수출한 후, 고객사의 계약 취소로 재수입해 올 경우 실제 수입품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세 납부 요구
 - * 우리나라의 경우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 12조(반입대상물품)'에 의거 하자 발생, 불량, 구매자의 인수거절 등으로 인하여 재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하지 않음
- (배터리) NCM(니켈코발트망간) 등 삼원계 배터리에 대해 중국에서만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해 국내 기업 차별
 - 삼원계 배터리는 LG, 삼성 및 일본 파나소닉 등 세계 1~3위 기업이 모두 쓰는 검증받은 신기술로 세계적 평가기관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평가받음
 - 중국 정부는 대기오염 문제로 화석연료의 사용을 제한하고 전기차의 보급을 확대 중인데, 중국 기업이 생산하는 리튬인산철(LFP) 방식만 보조금 대상에 포함
 - 2015년 현재 365억 위안 규모인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삼원계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버스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함

- 삼성 SDI와 LG화학은 중국 매출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어 올해 큰 피해가 예상되며, 지난해 완공한 삼원계 배터리 공장 운영에 애로 발생
- (화장품)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한중 FTA 체결로 인해 업계의 기대가 컸으나 **행정 검사와 허가증 발급 등에 걸리는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큼**
 - * 화장품 수출은 중국이 전체 수출에서 40.3%('15년 기준 11억 7,200만 달러) 차지
- 자외선차단, 미백, 제모 등 특수용도 화장품의 경우 행정허가검사 및 수입행정 허가증 발급 소요 기간이 길어 신제품 적시 출시가 어려움
 - * 행정허가검사(약 3~6개월) 및 행정허가증 발급(약 4개월) 총 7~12개월 이상 소요
- (철강) 최근 자국 방향성 전기강판사업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부과(포스코 37.3%)
 - * 방향성 전기강판은 전기기기인 변압기나 모터의 철심재료,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신재생에너지 소재 등 폭넓게 사용되며 일반 강판보다 가격이 3~4배 비싼 고부가가치 철강 소재
 - * 이와 별도로 중국에 대한 세계 각국의 규제 조치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의 저가 철강재 밀어내기가** 국내 업계에 피해를 줄 것이라 우려('16년 1~5월 중국산 철근 수입량은 작년 동기간 대비 27만 2,000톤에서 51만 5,000톤으로 89% 증가)

3. 개도국은 자국 산업육성 위한 규제, 시스템 미비로 인한 통상애로까지

- (인도) 자국 산업 육성을 취지로 한 규제강화가 눈에 띄며 관련 법규나 절차의 부재 등 시스템 미비로 인한 통상애로 사례 다수 발생
 - (통관) 다수의 품목에 대해 불투명하고 비합리적인 통관 행정 절차로 인도 항구에서 1~2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잦아 수출 어려움
 - 오류 등의 작은 실수에도 통관을 보류하고, 세관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 등 행정 절차상 불투명성으로 통관 지연 사례 빈번히 발생
 - 일부 고객사는 일부러 구매를 거부하고 세관에 제시해야 할 NOC(Non Objection Certification) 작성을 거부하여 재반출이 어렵게 되는 상황을 유도, 재협상을 통해 매우 유리하게 물품을 인도받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음
 - 인도는 주 경계 통과 시에도 판매세를 추가로 징수해 수출업체가 인도 전역 판매를 추진함에 있어 장애가 되고 있음

- (전자직인) 인도 세관은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해 관세 환급 절차가 길어지고 관세 혜택을 못 받는 경우 다수 발생
 - * 한-인도 CEPA 협정에 따라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도 인정해야 하는데 증명서 직인 자체에 대한 명확한 문구가 없어 전자직인 불인정 문제 발생
 - (철강) 최근 철강부문에서 수입규제국으로 부상, 현재 한국에 대해 반덤핑 6건, 세이프가드 3건으로 규제 또는 조사 진행 중
 - * 피소건 기준으로는 미국(27건) 다음으로 인도(12건) 제소 건수가 많으며, 수입규제 중에서도 강도 높은 세이프가드 조치가 빈발
 - (화섬) 인도가 화섬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자국 산업 보호 명분 아래 무분별하게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 규제 조치 남용
 - 스판덱스의 경우 연간 국내 수요의 14,000톤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5,000톤을 생산하면서 '14년 세이프가드 조사를 실시(무협의 판정), '16년에는 반덤핑 조사 착수
- (아세안) 자국 산업 육성정책과 종교를 내세워 현지시장 진출을 어렵게 하는 등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은 보호주의 조치 실시
- (자동차) ASEAN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일본계 자동차회사의 이해를 반영하여 현지 생산 중인 일본차에 유리한 규제를 차별적으로 도입

	비관세장벽
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2 배출량에 따라 10~50% 소비세 부과 - Eco Car 프로그램으로 일정 투자, 생산 조건을 충족하면 법인세를 감면, 부품수입 관세면제 등을 통해 자국 생산 차량에 혜택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진 크기별로 10~125% 사치세 부과 - LCGC(저비용그린카) 프로그램에 맞춰 사치세 100% 감면(일본 업체 해당) - 수입차 쿼터 할당
말레이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진 크기별로 10~125% 소비세 부과 - 수입차 쿼터 할당 - 수입완성차에 대해서는 CIF에 관세가 포함된 차량가격에 소비세, 국내 생산차량은 공장도가격에서 국내 부가가치를 제외한 가격에 소비세 부과
필리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가격에 따라 소비세 부과 - 2016 CARS 프로그램에 따라 현지생산 제조업체에 세제혜택 적용 계획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소비세 개정 통해 배기량 2000~3000cc 미만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이 현행 50%에서 60%로 인상되며, 배기량 3000cc 초과 승용차에 대해서는 현행 60%에서 최대 150%로 인상

출처 : 산업연구원

- (식품 화장품) 인도네시아의 경우 본래 식약청 인증 등록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현지 진출이 어려운데, **할랄 인증 의무화 실시**로 더욱 더 수출 타격 예상
 - * 할랄은 무슬림이 먹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슬람 율법에 따라 처리·가공된 제품으로 인도네시아는 ‘19년부터 모든 수입식품 등에 대해 할랄 인증을 의무화하고 화장품과 의약품으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
 - 식품의 경우 인증을 받는데 3~8개월이 걸리고 보통 2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며, 할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경우 인증식품과 별도로 유통 진열해야 해 차별
 - 화장품의 경우 품목 특성상 신제품 출시가 잦고 가짓수가 많아 인증을 받기 위한 행정적, 비용적 부담에 대해 국내 업계 우려 증가
- (중남미, 중동) **환경보호 명목으로 수입을 제한하거나 제도에 적합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해야 하는 통상 애로 다수 발생
- (자동차) 에콰도르에서는 승용차가 증가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환경보호 명목으로 승용차를 대상으로 기업별 연간 수입량(쿼터) 규정
 - * WTO 20조에 의거, ‘국민 보건을 위한 수입 제한’을 근거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음
 - ‘12년 1월 1일부터 기업별 쿼터를 규정하여 적용해 ‘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예정이었으나 연장
 - ‘16년, 1~5월 기준, 한국산 자동차의 수출이 44.4% 하락해 수입쿼터제가 보호 무역주의로 작용

<한국의 에콰도르 자동차수출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22,492	16,875	15,359	17,443	8,663

출처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타이어) 중동 국가에서는 타이어 라벨링 제도(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와 관련 시스템 미비로 업계 비용 부담 가중
 -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라벨을 갱신할 때 관련 웹상에서 신규 신청 및 갱신의 구분이 없어 추가 비용 발생
 - 사우디, UAE 등을 포함한 7개국으로 구성된 GSO(걸프지역표준화기구) 국가에서도 타이어 라벨링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관련 법규나 규정 등이 부재

V. 글로벌 보호주의 전망

1. 美 대선 누가 되든 보호주의 강화될 것

□ 자유무역의 수호자를 자처하였던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무역수지 적자 등을 이유로 **양 당 모두 보호주의로 급선회**

* 무역수지 적자 : ‘13년 6,880억 달러 → ‘14년 7,217억 달러 → ‘15년 7,370억 달러

□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는 역대 가장 강력한 보호주의적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선도해 온 공화당 정강에도 반영

○ (무역) 트럼프는 자유무역협정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았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주요 협정의 재협상 또는 폐기를 공약

-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 역사상 최악의 무역협정, 무효화 또는 재협상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 미국 제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 추진 중단

-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 : 미국인 일자리 감소, 무역적자 두 배, 재협상

* 공화당 정강 : “미국을 우선으로 하는 잘 협상한 무역협정 필요”

○ (환율)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언급하며, 환율 조작국에 대한 제재 강화 시사

* 공화당 정강 : “중국의 환율 조작, 정부구매에 있어 미국 제품 제외, 미국의 수입을 좌절시키는 자국기업 보조금 지급 허용 불가”

○ (안보)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를 지적하며 한국이 핵무장을 통해 스스로 방어 하든지 방위비를 더 부담하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무역흑자에 대해 비판

○ (보복관세) 환율을 조작하는 중국의 수입품에 대해 45% 징벌적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해 3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

○ 트럼프의 극단적 보호주의 통상 정책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하나 행정부 재량으로 강도 높은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활용할 가능성 있음

< 美 행정부 주요 무역구제 >

	수단	집행기관	무역구제방안
1	반덤핑 및 상계관세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	관세부과
2	201조 세이프가드	국제무역위원회	관세부과, 수입량 제한 등
3	337조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국제무역위원회	수입금지, 중지명령
4	일반 301조	USTR	양자협상, 관세부과, 수입제한,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 및 비관세 혜택 유예 등
5	스페셜 301조 지재권보호	USTR	
6	슈퍼 301조 우선협상대상	USTR	
7	122조 국제수지 위기 대응	대통령	최대 15% 관세인상 등(최장 150일간)
8	232조 국가안보 수입규제	상무부	관세부과, 수입량 제한 등
9	BHC 수정조항 환율조작국 대응	재무부	미국 정부 조달 금지, 해외민간투자공사(OPIC) 금융지원 금지 등

출처 : 코트라

□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안보 및 동맹 관계에 있어 트럼프와 상반되나 **통상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의 정책 강조**

○ (무역) TPP 협정 지지를 철회하고 TPP 협정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임금 상승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며 비준 반대

* TPP 협정은 11월 대통령 선거 이후 일명 레임덕 세션 중에 의회에서 비준되지 않을 경우, 비준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민주당 정강 : 무역협정이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기준, 환경, 공공보건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으며,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 필요

○ 대통령 직속 수석무역 집행관 신설, 무역집행 관련 인력 3배 증원 등 적극적으로 무역상대국의 불공정 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공약

* 클린턴 후보는 러스트벨트 지역인 미시간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에게 패배 후 자동차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음

○ (환율) 중국과 일본의 환율 시장 개입을 언급하며 적극 대처할 것이라 강조

* 美재무부는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독일을 환율 조작 '감시대상국' 리스트에 포함('16.4)

□ 일부 업계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고 자유무역에 비판적인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는 것이 가장 우려된다고 언급

○ 대선과 함께 6년 임기의 상원의원 중 3분의 1인 34명과 2년 임기의 하원의원 435명 전원에 대해 의회 선거가 실시될 예정

- 현재 민주당 상원대표로 FTA 체결을 반대하는 보호주의 성향이 강한 척 슈머가 유력해 트럼프의 정책에 협력할 가능성 있음

2. 보호주의의 뜨거운 감자 중국

□ (시장경제지위) 올해 말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 문제를 앞두고, 중국, 미국, EU의 통상 마찰 갈등 발생 예상

- *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게 되면 덤핑율을 산정할 때 국내가격과 수출 제품 가격을 비교해서 덤핑률을 산정하게 되나, 비시장경제일 경우 수출국의 국내가격이 아닌 제3국 가격을 적용해 덤핑률이 커져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음
- * 중국은 WTO 가입 당시 시장경제지위에 대한 인정여부를 15년간 유예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였는데, 시한 만료 '16년 12월 11일을 앞두고 중국은 시장경제지위가 자동 부여된다는 입장, 미국과 EU는 지금도 중국 정부의 시장개입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 자동 인정은 불가하다는 입장
- 미국은 정부, 의회 모두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에 줄곧 **반대 입장** 표명
- EU의 경우 EU회원국과 철강업계의 반대가 여전하나 최근 반덤핑관세 강화,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 감축을 조건으로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도 보임
-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을 앞두고 미국과 EU에서 반덤핑 제소가 증가하면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덤핑 제소 피해 발생**
 - 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과 EU의 대중국 반덤핑 제소 건수가 '13년 8건, '14년 11건, '15년 11건, '16년 5월 기준 12건에 이르러 빠르게 증가
 - 미국 상무부가 중국에서 생산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예비관세 부과 판정을 내린 것은 중국이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된 이유도 있음
 - * 쑤저우 삼성전자 : 110.09%, 난징 LG-판다 : 49.88%
- 또한 중국이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게 될 경우에는 국내 일부 업종의 경우 중국산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수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

3. 브렉시트, 보호주의의 심화 VS 자유주의의 확산

- 브렉시트가 세계화의 흐름을 막고 보호주의를 가속화 시킬 가능성 있음
 - 브렉시트가 영국과 EU의 실물경기와 금융 불안에 영향을 미치고 글로벌 교역 부진이 심화되어 보호주의를 심화시킬 것
 -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EU회원국 탈퇴, 스코틀랜드의 분리 움직임 논의에 영향을 줄 것이란 의견
 - 또한 이제 막 시장개방을 가속화하고 있는 개도국 내부에서 시장개방 반대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보호주의를 이용하려는 움직임 등장
 - * 일례로 인도네시아 민간 연구소인 CSIS 관계자에 따르면 브렉시트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Inexit of Asean/AEC 등이 회자되고 있으며, '19년 인니 대선 등에 보호주의가 이슈가 될 가능성 언급
- 반면 과도한 EU의 규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영국의 자유주의적 선택이라는 반론도 존재
 - 마이클 고브 영국 법무장관은 “EU 규제가 매주 영국 경제에 6억 파운드의 비용을 전가한다”고 비효율적 규제에 불만을 표함
 - 8만 페이지에 이르는 EU의 각종 협정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지하고, 영국의 경제 성장을 가로 막고 있다고 지적함
- 영국이 브렉시트 및 대외교역 조건 협상과정에서 자유무역적 성향을 보여 줄 것인가가 향후 보호주의 확산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
 - 영국은 브렉시트 후 미국, 중국, 일본, 한국과 통상 회담을 할 것이라 발표했으며, 연말까지 통상협상 전문인력을 300명 추가 배치할 예정
 - 그러나 영국의 의도와는 달리 브렉시트가 상징적 전환점이 되어 보호무역주의 회귀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여전히 존재

VI. 대응과제

- 자유무역을 역행하는 보호주의 조짐들이 장기적으로 개방경제로 성장한 한국경제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음
- (정부)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대화 채널 활성화, 합리적 분쟁 해결 등을 통해 자유주의 기조 유지 확대
 - (FTA) FTA 협정은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돌파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속적인 FTA 확대 및 기존 FTA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업그레이드 필요
 - TPP : 오바마 행정부는 연내 레임덕 세션 중 비준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한국도 TPP 참여를 통해 수출 기회를 확보하고 TPP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개선 기대
 - 한미FTA : 한미 FTA가 양국에 이익이라는 점을 USTR 및 US Chamber 등과 협력하여 적극 홍보
 - 한중, 한인도, 한ASEAN 등 경제적 비중에 비해 개방수준이 낮은 FTA 업그레이드 추진
 - 한중일, RCEP, 중미, 이스라엘 등 협상 중인 FTA 및 일본, GCC,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협상재개여건을 조성 중인 국가들과의 FTA는 핵심 이해관계에 대한 과감한 결단으로 조속히 협상이 시작될 수 있도록 조치
 - (대화채널) 정부 간 대화 채널 활성화, 통상 관련 부처 간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경제·통상 협력 관계 강화
 - 주요 국가와 정상회담, 장관급 회담 등을 통해 자유무역을 선언하고 보호무역주의 확산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자유무역 확대 기틀 마련
 - 주요 국가와의 공동경제위원회를 가동하고 무역위원회 간 대화채널을 마련하여 보호주의 관련 분쟁이 생길 경우, 조속한 상황 파악 및 협조 요청
 - (WTO) 미국 등 주요 상대국이 일방적으로 보호주의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WTO 차원의 경고 메시지와 중재를 통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해야 함
 - * 우리 정부는 미국이 '13년 한국산 세탁기에 9~13%에 달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해 '13년 승소 판정 받음('16년 현재 미국에서 상소한 상태)
 - * 미국, 일본, EU 등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관세에 대해 WTO에 제소,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최종 판정을 받고 중국은 '15년 수출 쿼터 폐지함
 - (사전 예방) 보호주의 사전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교류

- (오피니언리더)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싱크탱크와 협력**하여 더 넓은 층이 자유무역을 지지할 수 있게 공감대를 형성, 보호무역 정서가 강화되는 것을 경계
- (풀뿌리 Grass Roots 활동) 현지 시민단체 및 대한민국 수출기업들과 연계하여 상대국 정부와 의회 등을 대상으로 자유무역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됨을 적극 홍보
- (사전모니터링) 일단 수입 규제 조사가 개시되면 행정적, 비용적 부담이 발생하고, 해결되기까지 실질적으로 사업이 불가한 경우가 많으므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호주의 움직임이 있을 경우, 선제적 대응 필요

□ (기업)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해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함**

- (공동대응) 분쟁 발생 시 필요할 경우 정부 및 관련단체와의 정보공유를 통해 공동 대응 체제 구축 필요
 - * '14년 12월 터키에서 한국 휴대폰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하자 업계, 정부, 전경련은 터키 경제부장관 면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의 서한 전달, 조사 대상국인 한국, 중국, 베트남, 대만 4개국 협회 의견서 전달, B20 회의 등 전 방위적 대응으로 조사 종결시킴
- (통상전문가 활용) 국제기구, 무역 관련 전문가, 지역별 통상 전문가 등을 영입해 기업 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고, 업종별·지역별 영향 평가를 통해 효과적 수출 전략 모색
- (현지화) 현지화를 통해 상대국 정부 및 의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재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지속 홍보

□ (우리의 보호주의 요소 점검) 우리나라가 외국 기업에 대해 가하고 있는 **차별적 규제요소들을 점검하고 개선해 선진 통상 시스템 구축**

- USTR은 우리나라가 법률을 포함한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당초 한미FTA를 통해 기대한 것보다 미흡하다고 지적, 트럼프의 한미FTA 재검토 주장의 빌미 제공
- 진입규제와 보호보다 개방과 경쟁이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던 경험을 바탕으로 차별적 규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개방 검토해 통상마찰을 줄이고 우리 경제에 이익이 되는 방안을 모색

〈참고자료〉

KOTRA, 2015년 하반기 대한 수입규제 동향과 2016년 전망 보고서, 2016.1

KOTRA, 트럼프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미국이 활용 가능한 보호무역수단, 2016.5

산업통상자원부 외, 2015년 무역기술장벽보고서, 2016.4

무역협회, 미국 대선후보 확정, 한미통상관계의 향방은?, 2016.6

미국 민주당, 2016 Democratic Party Platform, 2016.7

미국 공화당, REPUBLICAN PLATFORM, 2016

WTO, Report on G20 Trade Measures, 2016.6

WTO, Report to the TPRB from the Director-General on Trade-related Developments, 2016.7

WTO, Annual Report 2016, 2016.5

산업연구원, 무역기술장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2016.3

산업연구원, FTA체결을 통한 TBT 규제협력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2015.12

삼정, 글로벌 식품 신시장 ‘할랄’, 2015.6

LG경제연구원, 짙어지는 세계화의 그늘, 보호무역주의가 자라고 있다, 2016.7

국제금융센터, 미 대선후보 경제정책 비교, 2016.7

비관세장벽포털 ntb.kita.net